



# ITU 제16차 전권위원회의 참가결과

이상학 · MIC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과

## 1. ITU 전권위원회의 개요

### 가. 기능과 개최시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권위원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를 매 4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전권위원회의는 ITU의 모든 선출직 간부 및 이사국에 대한 선거를 수행하며 ITU 헌장(Constitution)과 협약(Convention) 개정, 향후 4년간 전략계획(Strategic Plan) 수립, 향후 4년간 예산계획 수립, 각종 결의(Resolution) 및 결정(Decision) 제정 등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권위원회의는 이름 그대로 ITU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다.<sup>1)</sup>

### 나. 제16차 전권위원회의 일정 및 진행

이번 제16차 전권위원회의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모로코의 고도(古都)인 마라케쉬에서 회원국 158개국,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일정을 살펴보면, 처음 1주는 개막식, 의장단 선출과 우리나라 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주로 장관급)의 기조연설로 진행되었으며 2주차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출직 간부에 대한 선거가 있었다. 3주차는 헌장 및 협약 개정안, 결의 및 결정에 대한 세부 토의가 있었으며 4주차에는 이제까지 각 분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최종 토의 및 drafting 작업이 있었다.

회의는 크게 전체회의와 세 가지 분과회의로 나뉘어서 병행 진행되었는데, 헌장 및 협약개정을 위한 정책·법률 분과(Committee 5), 재정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분담금을 책정하는 재정분과(Committee 6) 및 정보사회정상회의(WSSIS), 여성문제, Internet Domain 문제 등을 다룬 총회작업반(Working Group of Plenary)으로 구성되었다.<sup>2)</sup>

또한 각 분과회의에서는 안전별로 참여하게 이견이 노정될 경우, 임시검토반(adhoc group)을 구성하여 안전별 이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매일 5~6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회의는 논쟁 여하

1) 다만, 실제로는 전권위원회의에서는 대체로 각 부문별(표준화부문, 전파부문 및 개발부문) 총회 및 자문반회의 등의 논의를 일단 거친 의제가 상정되기 때문에 주로 ITU의 전체적인 방향틀을 정하는 의제를 논의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 외 Committee 1은 각 회의 의장 및 부의장 등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이며, Committee 2는 각국 대표의 심의장을 검토하는 심의장 위원회이고, Committee 3는 이번 전권위원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므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에 따라 당초 회의시간인 오후 5시30분을 넘어 저녁 11시까지 진행되었다.

## 2. 선거관련 사항

### 가. ITU 선출직 및 이사국 현황

ITU의 선출직으로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3개 부문 국장(전파통신국, 표준화국, 개발국)과 전파규칙 위원회(RRB, Radio Regulation Board) 위원이 있다.

현 사무총장은 Y. Utzumi(일본), 사무차장은 R. Blois(브라질), 전파통신국장은 R. Jones(캐나다), 표준화국장은 H. Zhao(중국), 개발국장은 H. Toure(말리)이다. RRB 위원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별<sup>3)</sup>로 위원이 배분된다. 또한 ITU는 전체 회원국의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국을 선출한다. 현재 ITU 전체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이사국은 46개국이다. 이사국은 RRB 위원들의 경우처럼, 각 지역별로 이사국 수가 할당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제13차 니스 전권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계속하여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이번에는 이사국 4선에 출마하였다. 선출직으로는 RRB 위원에 입후보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1952년 ITU에 최초 가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출마자인 이기수씨는 KBS를 거쳐 약 20여 년동안 ITU 전파통신국에서 위성부문 전문가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무궁화위성 등록과 관련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다.

### 나. ITU 선거진행 및 결과

ITU 선거를 위해서 각 회원국은 사전에 정당한 투표권 즉, 각국 수반 또는 외교부 장관의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신임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임장위원회(Committee 2)를 구성하였다. 신임장위원회는 보통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선거는 2주차 화요일(10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순서상 먼저 선출직 간부의 선거를 시작하여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선거를 시작하였으며 이날부터 3일에 걸쳐 3개부문 국장선거, 이사국 및 RRB 위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 (1) 선출직 간부 선거

사무총장은 현 사무총장인 일본의 Y. Utzumi가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여 무난하게 재선<sup>4)</sup>되었다. 사무차장에는 현 사무차장인 브라질의 R. Blois와 알제리의 A. Boussaid가 입후보하였으며 투표결과 브라질의 R. Blois가 재선되었다.

표준화국장과 개발국장은 현 국장인 중국의 H. Zaho와 말리의 Toure가 단독 입후보하여 각각 표를 얻어 재선되었는데 주목할 사항은 사무차장 및 국장들이 사무총장보다 더 많이 득표를 하였다는 점이다.<sup>5)</sup>

선출직 간부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전파국장이었다. 전파국장은 사실상 ITU가 세계 전기통신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로서 현 전파국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영국의 M. Johnson, 이탈리아의 F. Bigi, 러시아의 V. Timofeev, 이란의 K.

3) ITU는 전 세계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A 지역(미주), B 지역(서유럽), C 지역(동구 및 러시아), D 지역(아프리카), E 지역(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 나누어진다.

4) ITU 규정상 사무총장 등 선출직 간부들은 1회 연임까지 허용된다.

5) 이것은 향후 사무총장의 입지가 그다지 확고하지 않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다른 선출직 간부들과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Arasteh가 출마하였다. 규정상 과반수를 넘어야 당선 되는 상황에서 1차 투표결과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6시간후 2차 투표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Arasteh는 사퇴하였고 최종적으로 러시아의 V. Timofeev가 당선되었다.<sup>6)</sup>

한편, 전파규칙위원회(RRB)는 비록 비상근직이고 명예직이지만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다. 각 지역별 출마자중 A와 B 지역은 경쟁이 없어 큰 의미없는 선거가 치러졌으며 C, D 지역과 우리나라가 속한 E 지역이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다. C 지역에서는 폴란드, 키르키즈스탄 및 유고 후보가 출마하여 폴란드와 유고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D 지역은 탄자니아, 카메룬, 모로코, 나이지리아 잠비아 및

우간다 후보 등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이 중 모로코, 나이지리아 및 카메룬 후보가 당선되었다.

3명을 선출하는 E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외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뉴질랜드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이기수씨가 2등으로 당선되었다. 현지에서 대표단의 득표활동, 외교공관을 통한 사전 지지활동과 이기수씨 본인의 적극적인 교섭 및 그 동안의 평가 등이 작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발돋움하였음을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선출직과 RRB 위원들에 대한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업반		주요업무	현 직위
ITU 사무총장		Y. Utsumi(일본)	현 총장
ITU 사무차장		R. Blois(브라질)	현 차장
ITU-D 국장		H. I. Toure(말리)	현 국장
ITU-T 국장		H. Zhao(중국)	현 국장
ITU-R 국장		V. Timofeev(러시아)	정보통신부 차관
전파규칙위원회(12명)	A 지역(2명)	J. R. Carroll(미국)	RRB 의장
		C. A. Merchan Escalante(멕시코)	현 위원
	B 지역(2명)	P. Aboudarham(프랑스)	현 위원
		G. Kovacs(헝가리)	현 위원
	C 지역(2명)	W. Moron(폴란드)	통신규제청 부청장 자문
		M. Simic(유고)	RTV of Serbia 국장
	D 지역(3명)	H. Lebbadi(모로코)	
		S. Taylor(나이지리아)	Kemilinks International Ltd. CEO
		A. Zourmba(카메룬)	통신규제청 부국장
	E 지역(3명)	R. N. Agarwal(인도)	현 위원
		A. A. Bajwa(파키스탄)	파키스탄텔레콤 국장
		이기수(한국)	ITU 전파통신국

6) 유럽은 전파분야에 강한 관심을 보였으나 영국과 이태리가 복수 출마하여 득표력이 약화되어 결국 전파국장 진출에 실패한 것이다.

## (2) 이사국 선거

전체 189개 회원국중 46개 이사국을 선출하는 이사국 선거는 5개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사실 전권위원회회의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 따라 전체 4주간의 회의중 전반 2주는 선거에 따른 각국의 홍보, 득표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유효표 147표중 총 124표를 얻어 전체 46개 이사국중 5번째로 많은 득표를 하여 무난히 이사국 4선에 진출하였다.

이사국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별 ITU 이사국(다득표 순)

지역	이사국(총 46개국)
A 지역(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쿠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수리남(8개국)
B 지역(서유럽)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터키, 이태리(8개국)
C 지역(동유럽)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5개국)
D 지역(아프리카)	모로코, 카메룬, 남아공, 알제리, 케냐, 이집트, 세네갈, 튀니지, 말리,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가나(13개국)
E 지역(아시아/대양주)	인도, 중국,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사우디, 일본, 파키스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란(12개국)

## (3) 이번 선거의 의미

이번 선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금년 초부터 선거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왔다. 특히, 정보통신부와 TTA, ETRI, SKT 및 RAPA 전문가들로 선거활동팀을 구성하여 모로코 현지에서의 득표활동에 대비하였다. 이들은 현지에서의 리셉션 준비 및 초청연락 등은 물론 전체 189개 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국 대표단을 직접 만나 교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나라가 이사국에 4선에 진출하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ITU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주도적인 ITU 활동, 즉 ITU가 현재 안고 있는 최대 과제인 ITU 개혁에 있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미묘한 입장을 견지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체적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도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각 부문별 국장, 사무총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사항은 영국이 이사국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영국 대표는 투표용지에 영국의 국가명이 불어로 적혀있어 투표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불만하였지만 영국의 이사국 탈락은 영국의 정보통신 현황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sup>7)</sup>

## 3. 전파통신 분야의 주요 쟁점사항 : 위성망적체 해소 관련 실비용 납부

ITU 전파통신국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는 위성망 등록적체를 해소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성망 궤도 확

7) 과거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진화의 흐름속에서 독자적인 기술발달을 도모하지 못하고 미국 또는 타 유럽의 안정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정보화를 추진했던 결과가 결국 세계적으로 영국의 위상을 그리 크게 부각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할 수 있다.

보 등을 위해 각국에서 신청한 소위 Paper Satellite의 정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 ITU에서는 이미 '98년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제 15차 전권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98년 전권위원회의 이후부터는 등록자료 발간 등 위성망 등록처리에 따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는 비용회수(cost recovery)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이사회에서는 위성망 등록비용 비용회수(cost recovery) 방법으로 2002. 1. 1 이후 접수된 위성망에 대해서는 등록자료 제출시부터 6개월 이내 비용을 납부하도록 결정(Decision-482)하였다.

문제는 전파통신국의 등록작업 지체에 따라 오히려 2002. 1. 1 이전에 위성망을 신청한 사업자가 오히려 2002. 1. 1 이후에 신청한 사업자보다 늦게 비용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초 2002. 1. 1 이전에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자료 발간시를 기준으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었기 때문이다.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는 2002. 1. 1 이전에 신청한 사업자도 이번 전권위원회의 종료후 6개월 이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유럽에서 지적인 불평등의 해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ITU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공평함에도 있지만 동시에 국제기구로서 예측 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유럽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유럽의 제안은 소급효과를 가져오며 많은 위성 사업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조기납부에 따른 비용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더구나 비용납부에 따른 불평등과 Paper Satellite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사항이며, 비용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개도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사안을 특별한 실익도 없이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을 들어 유럽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며칠을 거뒀던 논의결과, 유럽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비록 유럽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내년 이사회에서 위성망 등록 비용회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즉 cost recovery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위성 사업자의 부담은 증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03년 이사회에 대비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4. 표준화 분야의 주요 쟁점사항

##### 가. WTSA(세계전기통신표준화 총회)에 대한 역할규정

일본과 캐나다는 공동 기고문을 통해 'ITU 표준화 부문(ITU-T)의 작업개선을 위하여, 향후 WTSA가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개발하고 표준화 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증진시키도록 하며, 또한 WTSA가 보다 고차원적인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과 아울러 전략계획 및 효율적 재정운동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신규 결의안을 제안하였다. 논의 결과, ITU 표준화 부문의 경우, 타 부문과는 달리 부문회원(Sector Member)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TU-T의 작업개선을 위하여 WTSA가 향후 ITU-T 활동개선을 위하여 회원국과 부문회원 공동의 협력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부분의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표준화 부문의 구조를 포함한 부문 내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의 개선작업은 향후 WTSA 및 자문그룹(TSAG)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시장 요구의 반영 및 부문회원의 참여와 표준화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방법 및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세계 각 국의 ITU-T 부문회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여야 필요가 있다.

## 나. ITR 개정

이번 전권위원회의에서 회원국간,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었다.

국제정산에 관한 사항인 ITR은 1988년 멜버른 WCIT에서 개정된 후 현행화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가깝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민영화됨에 따라 국제정산은 각 정부간 협약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 ITU 이사회에서부터 유럽 각국과 우리나라는 ITR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은 아직 국가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통신사업자간 협약보다는 정부간 협약이 약소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ITR의 현행화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ITR 개정을 위해서는 WCIT라는 회의의 소집이 필요하고 이 회의개최를 위해서는 최소 100만 USD가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미국은 ITR을 현재대로 놓아두자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WCIT는 2006년 또는 2007년에 개최되는데 이를 위해서 2006년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WCIT 개최에 대한 지시를 이번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의로 남기자는 데 있었다. 유럽국가에서는 전권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전권위원회의의 결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결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고 개도국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WCIT 개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결국, 이 논의는 절충안으로 처리되어 2006년 차기전권위원회의에서 WCIT 개최일정을 2007년 또는 2008년으로 정하되 WCIT의 개최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sup>8)</sup>

## 5. 전기통신 개발분야의 주요 쟁점사항

### 가. 정보사회정상회의(WSSIS) 개최 준비

내년 12월과 200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사회정상회의는 UN이 주최하되 그 준비과정에서는 ITU가 주도하게 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 그동안 ITU는 WSSIS 준비를 위해 기금모집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며, 참여자가 정보통신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각국 외교관, UNESCO, UNDP, 시민사회단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의제채택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전권위원회의에서는 지난 9월 중순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식 의제회의의 결과를 기초로 총회작업반(WG of Plenary)에서 WSSIS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WSSIS 선언 및 행동계획에 담기기를 원하는 내용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 WSSIS 준비위원회(PrepCom)'에서 최종 보완을 거쳐 2차 WSSIS 준비회의(PrepCom-2)에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sup>9)</sup>

이번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 WSSIS 결의문에 ITU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WSSIS 선언(Declaration)에는 '모두에게 ICT 접근 제공', 'ICT를 경제 및 사회발전 특히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의 수단

8) 결국 2006년 전권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쟁의 소지를 남겨놓았다고도 할 수 있다.

9) 많은 국가에서는 PrepCom-2가 내년 2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사회 WSSIS 준비위원회'에 각 회원국이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으로 활용', 'ICT 사용에 있어서의 신뢰와 보완'이 주요 원칙으로 담길 것을 제시

-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는 'ICT 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저렴한 접근', '통신정책 및 규제 틀', '정보격차 측정', 'ICT 관련 연구개발 참여', '인적자원 개발' '지역사회 단위의 ICT 접근',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 행동', 그리고 'ICT 사용에서의 신뢰와 보안확보'를 제시

## 6. ITU 기타 분야 : 분담금 및 ITU 예산

ITU는 각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이 분담금은 자발적인 것으로 주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다. 전권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이 납부할 분담금 단위 수를 정하고(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1단위의 기준액을 정한다. 스위스와 중동국가들은 향후 WSIS 등 중요한 행사를 고려하고 지난 4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분담금 1단위의 기준액을 현 315,000 CHF에서 330,000 CHF로 인상하자고 주장하였고 우리나라, 미국 등은 ITU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통해 물가상승율을 상쇄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도 고려해야 하므로 현 상태로의 동결을 주장하였다. 투표까지 거친 논의결과, 향후 2년간(2004~2005)은 현재대로 동결하고 나머지 2년(2006~2007)은 330,000 CHF로 인상하자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갑자기 영국, 이태리, 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분담금 액수를 대폭 삭감하였다. 유럽국가들은 분담금 삭감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영국과 이태리의 경우 이사국 낙선 및 전과국장 낙선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측되며,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 ITU의 늦은 개혁행보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볼 수

도 있다.

결국, 향후 4년간의 예산안의 대규모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이 예산감축은 향후 ITU 각 부문, 특히 사무국의 긴축재정을 의미하며 사무총장이 경고한 바와 같이 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당장,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음회기부터 ITU 이사국 대표 1인에게 제공하던 항공 및 숙박비도 개도국에 한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담금 단위에 대한 인상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분담금의 이탈과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번 전권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7. 결론 : ITU 구조개혁과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

이번 전권위원회의의 주제중 하나는 ITU 개혁이었다. 특히 제2세대 및 제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과정에서 ITU가 사실상 주목받는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ITU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자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지난 수년간 ITU 개혁을 위한 작업만을 운영하여 권고안을 수립하게 한 것도 그런 개혁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각종 준비회의 및 부문별 회의에서 표출되었던 지역별, 국가별 이견이 다시한번 표출되었다. 각 지역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유럽 : 민간부문 참여확대를 통한 급진적 구조개혁
- 미국 : ITU 조직자체의 비용절감 및 효율화·능률화
- 일본 : 사무총장의 권한강화를 통한 구조개혁
- 우리나라 : 민간참여 확대는 지지하되 점진적 구조개혁

- 아랍 및 개도국 :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 명확한 역할구분

논의결과, 우리나라가 지지하는 점진적 구조개혁이 다수 지지를 얻었다.<sup>10)</sup>

이번 전권위원회의 결과물 중 개혁적인 조치는 ITU 선거절차를 확립하고 텔레콤 개혁지 선정등에 있어서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결의하였으며, 그동안 모호했던 RRB 위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등에 대해서 명확화 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ITU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로 넘겨졌

다. 이사회의 4선 진출국으로서, 정보통신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ITU 개혁을 포함하여 ITU 라는 거대 조직의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는 선진형 개도국(또는 신흥공업국)이지만 IT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나라 전반의 입장과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IT Diplomacy' 라고 할 수 있다. 



10)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ITU 개혁은 이번 전권위원회에서는 응두시미로 끝나고 말았다는 비판도 있다. 즉, 표준화분야에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사무총장 및 차장과 3국장을 모두 선거로 뽑는 ITU 선출시스템의 개혁도, 3000G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범위확장도 모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